

한·미 FTA 공동위원회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서

- 통신주권 회복·통신공공성 강화·AI국가전략기반 구축 -

수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 FTA정책국

작성: 조태욱_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010-3310-5677)

일자: 2025년 12월 07일

■ 1. 제안 목적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이달(12월중)에 예정된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통신주권 회복, 외국인 지분 규제의 형평성 재정립, 월가 중심 단기자본의 배당 압력 완화, 특별법 제정의 국제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협상 전략을 제안함.

대한민국의 AI 국가전략은 데이터-컴퓨팅-통신의 3축 위에 구축되며, 그중 통신 인프라가 가장 취약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반임.

그러나 지난 25년간의 민영화·고배당 구조는 국가 기간통신망을 시장논리와 해외 금융자본의 수익 모델로 종속시킴.

■ 2. 문제 진단

(1) 2000~2025.6 통신3사 외국인 배당 총액 13조4,249억 원 규모

(KT: 4조8,510억원, SKT: 7조5,321억원, LG유플러스: 1조418억원)

이는 국민이 납부한 통신요금의 상당 부분이 국내 통신망 투자·보안 강화·고용 안정이 아닌, 해외 특히 월가 기반 초국적 사모펀드·ETF(상장지수펀드) 운용사의 배당 수익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의미함.

(2) 최근 10년간 배당 집중도 확대

2015~2024년 외국인 배당만 약 5조6천억 원.

이는 매출의 절대금액 대부분이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내수기업인 통신3사에서 매년 약 5,600억원 규모의 국부가 해외 금융시장으로 이전되는 구조가 半영구적으로 지속된다는 의미임.

(3) 월가 초국적 사모펀드의 '배당 지배 구조'

현재 통신3사의 주요 외국인 주주는 대부분 '웰링턴' '티로우프라이스' '시티뱅크' '코페르닉글로벌' 등을 비롯해 월가의 글로벌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등이며, 이들은 배당 수취를 통한 단기 수익 극대화(Income Strategy) 외에는 통신공공성·망안정

성·설비투자·노동인권 등에 관심이 없음.

(4) 고배당 압력 → 설비투자 축소 → 통신망 취약화 → 통신대란 → 보안 사고 → 재난대응 실패 → 외주·하청 구조 심화 → 인력 감축 및 자산매각의 반복
이 모두가 월가 단기자본의 배당 요구와 연동되어 있음.

(5) 한·미 FTA 구조가 통신주권 회복의 걸림돌

외국인 지분 49% 허용, 역진불가 조항, ISDS 리스크

미국은 통신업 외국인 지분 20% 제한(연방통신법 제310조)

→ 동맹국 간 형평성 자체가 무너져 있음(군사주권 뿐 아니라 통신주권도 상실)

(6) 세계 주요 통신기업은 이미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폐지

일본 NTT: 2017년 NYSE 상장 폐지

영국 BT: 2019년 폐지

프랑스(FT=>Orange로 명칭변경): 2024년 폐지

→ 단기 금융자본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통신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
한국만 과거 틀에 갇혀 있을 이유가 전혀 없음.

■ 3.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확보해야 할 5대 협상 의제

1) ‘지분 규제 형평성 원칙’ 공식 제기

미국은 20% 제한, 한국은 49% 허용 → 불균형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 지분 상한 협의”를 공식 아젠다화.

2) 역진불가 조항 완화 및 재해석 확보

AI·보안·재난 대응 기반 시설은 기존 FTA 체계의 예외로 분류할 수 있음을 주장.

3) ISDS 규제 리스크 완화

통신·AI 인프라 정책 결정은 비차별적 공공 목적 규제임을 명시하는 문구 확보.

4) NYSE 상장 폐지에 대한 정책 자율성 보장 선언

NTT·BT·Orange 사례 제시 → 한국도 마찬가지로 상장 폐지가 제약될 이유 없음.

5) ‘AI-통신 인프라 워킹그룹’ 설치 요구

FTA 체계가 미래 기술환경에 적합하도록 제도적 기반 재정비.

■ 4. 정책 목표

1단계: 공동위원회 회의록에 문구 확보

“통신 분야 구조 변화에 따른 재검토 필요성 인정.”

2단계: 외국인 지분 상한 조정의 정당성 확보

미국과 동일한 20% 체제로의 전환 검토 착수.

3단계: 통신주권회복·통신공공성강화 특별법 제정 기반 마련

특별법 주요 내용:

- 외국인 지분·배당 구조 공공관리
- 설비투자(CAPEX) 의무화
- 보안·재난 대응 의무 강화
- 망 유지·보수 노동 안정성
- 해저케이블·국제백본 국가 통제력 강화
- 초저지연·초고신뢰 AI 인프라 국가전략화

■ 5. 핵심 메시지 (미국 측 협상 프레임)

“동맹국 간 기간산업 규제는 상호주의가 원칙이다.”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통신)에 기존 FTA 규정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한국 통신 인프라의 안정성은 주한미군 운용 등 미국의 전략 이익과 직결된다.”

“한국의 상장 폐지 논의는 글로벌 통신기업들이 이미 선택한 정상적 조치다.”

■ 6. 결론

이번 공동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통신주권 회복과 통신공공성 강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

13.4조 원 규모의 半영구적 외국인 배당 유출 구조를 바로잡고,
AI 시대 국가 핵심 기반인 통신망을 시장·월가의 논리가 아닌
국민과 국가안보 그리고 노동인권의 논리로 재정렬해야 함.